

‘국정원 개혁’ 대세... 여야, 국내파트 해체 논란

與,朴대통령 개혁방향과 보조... 중진들 근본 개혁 촉구 野, 남재준 사퇴·국내파트 해체 주장... ‘셀프 개혁’ 비판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개혁 언급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정원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개혁의 주체, 국정원 업무 중 국내파트 존치 여부 등 각론에서는 시각차가 존재해 논의 과정이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여야는 9일 현재 정치·대선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정원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밝힌 ‘국정원 자체 개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찬성, 민주당은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국내 파트 해체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유일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개혁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무너진 국정원의 명예와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대공·방첩·국제범죄 등을 하게 돼 있는데 국내정보 수집은 안 되고 해외 정보만 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며 국내·국제정보 분리 불가론을 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복세력이 있던 정치파트에 대해 기관 과감 축소나 인원제한 등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7선의 정몽준 의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작업이 있었지만 그 작업은 국정원 자체에 맡겨져 왔다”며 국정원 자체 개혁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고, 5선의 이재오 의원은 국내 파트의 완전 해체를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 “여차피

국회 입법 사안이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사안”이라며 국회가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제일 큰 문제가 국내의 정치, 사회문제에 대해 정보수집을 한다는 미명 하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걸 100%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당내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정보요원들

의 기관 출입을 폐지하되 국내파트의 대북 기능 및 온·오프라인의 대테러 감시 업무를 떼어내 다른 파트로 이관하고 순수 국내 업무는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우선 개혁의 첫 단추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정원 자체 개혁을 주문한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국정원 개혁 방향으로 민주당은 ‘국내 파트 해체를 통한 정치개입 원천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

석,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지금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다는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전 원내대표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녁’에 출연, “(박 대통령의 언급은) ‘셀프 개혁’을 하라는 것인데, 개혁의 대상이 어떻게 개혁을 하는가”라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완전히 막는 새로운 개혁이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민주당은 9일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의전당에서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개혁촉구 당원보고대회를 열었다. 김한길 대표와 신경민 국정조사특위위원장 등이 국정원 개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토론회·SNS 활용 국민 참여·소통 활성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새 정부의 3대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 중 하나인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8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한국적 국가공론모형을 개발하고 집단 지성을 활용한 국민대토론회나 SNS를 활용해 국민 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위가 단기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원회 활동이 국민으로부터 그 존재를 인정받고 기대를 받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파급 효과

큰 국가적 미래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과 소통하며 갈등을 예방·조정하고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절실한 것은 국민통합 문화와 가치의 형성인 만큼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우수한 사례도 적극 발굴,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해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등 주요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여야, 정상회담 대화록 ‘최소 범위’ 공개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9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씩 열람한 뒤 여야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최소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화록 열람과 관련해 회동, 이같이 결정했다. 또 공개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공개 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만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최소한 범위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양 당은 필요할 경우 국회 운영위 위원회 아니더라도 상임위원 사·보 임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열람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아 하기로 했다.

여야는 10일 오전 11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여야, ‘국정원 국조’ 신경전 고조

새누리 “김현·진선미 의원 사퇴 않으면 특위 불참”

민주 “도둑이 경찰에 그만두라는 격”... 계획서 채택 난항

여야는 오는 1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나 국조특위 위원에 대한 자격 문제, 국정조사의 범위와 증인 채택, 회의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9일에도 상대 측 국조특위 위원에 대한 자격을 문제삼아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국조특위 제척(배제) 사유 논란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정문현·이철우 의원은 이날 특위 위원직을 전격 사퇴하며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직 퇴진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물귀신 작전”이라며 불퇴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대처했다.

정문현·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저희에게 국정원 출신, NLL(북방한계선) 의혹 제기 당사자 등을 이유로 들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공세에 악용하고 있다”며 “불필

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원활한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현·진선미 의원도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위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둑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나머지 경찰을 그만두라고 주장하는 적반하장식 전형적 꼴수”라며 “새누

리당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김, 진 의원에 대한 물귀신 작전을 그만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국조 범위와 증인 채택을 놓고서도 팽팽히 대립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새누리당의 대선 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입수 의혹은 사실상 한 묶음인 만큼 대화록 사전입수 부분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차단

막을 쳤다.

또 민주당은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현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 경우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국정원 직원 매관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김부겸 전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김승남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차질없이 추진해야”

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고흥군 일대에 설립하기로 약속한 핵심공약인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밝힌 지역공약 추진원칙을 보면 약속한 지역공약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우선하고 열악한 지자체에 재원부담의 책임성마저 떠넘기

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운영발주가 조속하게 진행되어야 내년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
-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
-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
-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
- 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
- 지상1층 약국 69P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
-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만원
-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림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만원
- 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0만원 / 분양가 5억7500만원
-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0만원
- 지상2층 볼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0만원
- 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
- 지상2층~3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0만원
- 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
- 지상3층~4층 영화관 (인정확정)
-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